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●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주요 기금 통합 추진 계획 ■ '26-9-1 농림축산식품부

[예산 규모 및 편성 방향]

- 농림축산식품부는 '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를 22조 2,215억원으로 편성하여 '26년 20조 1,362억원 대비 10.4%(2조 853억원) 확대
 - 증가액(율) 2000년 이후 최대이며, 농지·농안·FTA 등 3개 기금을 통합, '(가칭) 농업발전기금' 신설도 함께 추진
 - 미래대응기금 사업 예산 포함, 4개 기금 (농지·농안·FTA·축발) 누적 채무 3.1조원 상환분까지 반영 시 전년 대비 25.7%(5조 1,719억원) 증가한 25조 3,081억원

[주요내용]

-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
 - (공익직불 3조 원 돌파) 기본형 직불 현실화(비진흥지역 밭 지급단가인상, 138~150만원/ha→ 170~187), 전략작물직불 확대(4,196억원 → 4,568) 등으로 직불예산 29,703억원 → 30,615
 - (가격안정제 도입) 주요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시 차액 보전(91억원, 신규)
 - (재해·방역 대응 강화)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(7,769억원 → 8,313), 재해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'농작물 준보험' 신설(77억원, 신규), SAT1형 구제역 백신 선제 확보 등 방역 역량 확충(440억원, 신규)
 - (청년농 단계별 지원) '(가칭) 청년농업학교' 신설 (1,150명, 90억, 신규), 영농정착지원금(1,065억원), 후계농육성자금 (1조원 → 1.13), 청년농 활용 가능 농지 공급 확대(18,077억원 → 22,617)
- 농업 생산·수급·유통 구조 혁신
 - (공동영농 확산) 공동영농법인 육성으로 농업 규모화·효율화 촉진 (26억원 → 228)
 - (투입재 지원) 필수농자재법 시행('27.12.)에 대비한 필수농자재 투자자금 신규 지원 (504억원, 신규), 비료 원료구매자금 확대(2,000억원 → 5,000)
 - (농축산물 수급 관리) 위성·드론 및 AI 예측모형을 활용한 농업관측 고도화 (192억원 → 209), 생육관리·출하조절 지원 (226억원 → 420), 산란계 사육시설 신·증설 자금(3,000억, 신규), 낙농 용도별 차등가격제 확대(431억원 → 760), 공공분유제조시설(9억, 총 300억원, 신규)
 - (온라인 도매시장·유통 혁신) 스마트팜필먼트센터 구축(55억, 신규), 온라인도매시장 결제·정산자금 확대(1,000억원 → 1,500), 스마트 APC 확충(155개소, 278억원)
- 농촌 기본소득 및 정주여건 개선
 - (농어촌 기본소득 확대) 대상 지역 확대 ('26년 17개 군 → '27년 35, 3,047억원 → 11,658), 지방정부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비율 상향 (40% → 50)
 - (상생·창업)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 최초 반영(2,000억, 신규)
 - (필수서비스·정주여건 개선) AI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확대(82개군, 290억원 → 724), 농지연금 확대(2,766억원 → 3,444), 농촌공간 재편(신규 20개소, 1,322억원), 패시브하우스 정책자금(600억, 신규)
- AI 활용·K-푸드 글로벌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
 - (피지컬 AI·스마트농업) 현장 실증·확산 투자(208억, 신규),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자금 도입(3개 단지, 441억, 신규)
 - (K-푸드 수출·한식 세계화) K-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 (1,360억, 신규), 수출바우처 확대(720억원 → 880) 등

- (농식품산업 전략 육성) R&D 확대(2,617억원 → 2,740), 농식품 모태펀드 확대(500억원 → 550), 스케일업 자금 (300억, 신규)
- 국민 먹거리 돌봄·동물복지
 - (먹거리 지원 확대)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·단가 확대 (40억원 → 866, 수산물 추가), 수요에 맞는 먹거리 돌봄 지원 확대 (천원의 아침밥 111억원 → 174,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158억원 → 314)
 - (동물복지 기반 구축) '동물복지진흥원' 설립 준비 (10억, 신규), 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(39억, 신규)
- (가칭) 농업발전기금 설치 추진
 - (추진 배경) 농지·농안·축발·FTA 등 기금 자체의 자원 부족과 채무 누적(공자기금* 예수금 약 3.1조원, 연간 이자 약 1,200억원)으로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
 - * 정부가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모아 통합 관리하고 공공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설치
 - (통합 방안) 농지관리기금·농산물가격안정기금·FTA 기금 3개를 '(가칭) 농업발전기금'으로 통합, 농특회계 전입 근거 신설로 자원 확충
 - (추진 방안) 통합 시점에 기존 채무 일괄 정리, '27년 예산 결산은 농특회계 여유자금으로 보전, 자금관리는 농어촌공사·aT·종자원 등에 위탁, 단일계정으로 운영
 - (기대 효과) 가격안정제·농지매입 등 핵심사업의 안정적 추진, 기금 간 칸막이 해소로 신규 정책과제 대응력 제고

[기대효과]

- 농가 경영안전망 강화와 농업 구조혁신 동시 추진, 향후 정책수요에 대응할 중장기 재정 기반 마련

[향후 일정]

- (입법·심의 절차)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('26.9.1.) 이후 정기국회 제출, 국회 심의 후 '27년 예산 확정 예정
- ❖ 농특세 세입 증가 계기로 농업예산이 역대 최대이나, 가격안정제·동물복지축산직불 등 신규 사업의 현장 안착 여부와 기금 통합에 따른 실질적 재정건전성 개선 효과는 국회 심의 및 시행 과정 시 지속 점검 필요